

중국인 유학생 관리 총력

전북도, 3월 입국 전체 유학생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전북도는 이번 주부터 입국하는 모든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3월 중에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모두와 현재 입국 후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 없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온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차원으로 입국 초기에 진단검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3월 입국자 수는 입국예정자로 조사된 1,800여명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월 마지막 주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 수도 입국예정자 대비 3분의 1 수준인 200여명에 그쳤다.

교육부도 지난달 28일 중국 교육부

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2월 28일 18시 이후 즉시 적용됐다.

또,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건비 등 예비비 42억원을 긴급 편성해 전국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대학들도 대학 내 코로나 비상 대책반을 총장체제로 격상 운영하고 있으며, 개강도 2주에서 4주를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내 대학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 중국 유학생 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각 대학까지 수송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기숙사 입소를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자가격리 유학생에게는 지속적으로 기숙사 입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 입소생과 자가격리 유학생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와 외출자제, 등교금지 등 전담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119 소방서 등이 대학가에 항시 대기 중에 있다.

대학이 위치한 시군에서는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 방역과 매일 1회 이상 별도 수송, 중국 유학생에 대한 갈등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통장회의 시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원로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변지역 주민 상생 협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주대는 교내 입점 수익상사 18개 업체 임대료 20%를 감면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중국인 입국 유학생 관리에 온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면서 "3월에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기자

文대통령 “30조원 투입... 성패는 속도”

“정부는 추경 통과되면 현장서 효과 체감하도록 만전 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그야말로 비상 경제 시국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하고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며 “지난주 종합 대책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30조원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저임금·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감염병 선별진료소와 음압 병상 확충 등 감염병 체계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며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투입에 공감하는 만큼 이해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넘어서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별히 각부처에 당부한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본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의 모든 조정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마스크 충분히 공급 못해 국민께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관련 “마스크 업체 물량 늘리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최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며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생산 업체들이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넘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 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공적 공급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 서도 못 구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

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대처에 온 사회가 방역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뛰어나고, 방역 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이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응원과 봉사가 줄을 잇고 있다”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뉴시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발간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총선 가이드라인’ 배포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공무원의 행위 가이드라인(지침)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1만여 부를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허용·위반 사례를 담았다.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련 행위 제한,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정당 및 후원회 가입 금지,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원 임 제한,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참고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 중립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해주시길 바란다”며 “동일한 사안이라도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 여부를 판단이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마스크 필터 생산업체 방문

“필터 증산에 감사... 가능하면 물량 더 늘려달라”

대구·경북 현장 지휘 8일차를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필터 생산 업체를 방문해 생산량 증가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3일 오후 경북 구미 소재 MB(멜트블로우) 필터 생산업체를 방문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원재료 중 하나인 MB 필터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

장 건의에 따라 필터 증산 방법 관련 조언을 듣기 위해 업체를 방문했다.

정 총리는 업체가 타제품 필터 생산 기기를 마스크용으로 전환해 생산을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직 마스크 수요를 맞추기 부족한 만큼 생산량을 늘리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가능 수단을 동원해 마스크 공급을 늘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마스크 생산을 위해 업체가 다른 용도를 조정해 생산해주는 것에 감사한다. 가능하면 조금 더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로 대구·경북 지역 현장 점검 8일차를 맞았으며, 마스크 수급 대란 대응 일환으로 전날엔 경북 문경 소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